

의정칼럼



정다은
광주시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광주광역시에 설립하겠다” 공약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광주 AI집적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AI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명확한 국가 전략이었다. 실제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유일하게 ‘광주’가 명시됐다.

광주는 지난 7년간 4천389억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를 완비했다. 88.5PF급 데이터센터, 120MW급 전력 인프라, 4만6천㎡의 부지, AI대학원과 사관학교까지 갖춘 도시는 광주가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광주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지금 기업의 판단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삼성SDS가 공모 마감 직전에 국가 AI컴퓨팅센터의 공동추진 의사를 전남도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지 지역이 기업의 선택에

AI 강국의 길, 정책 신뢰에 대한 응답서 찾아야

따라 확정되는 분위기다. 국가전략사업이 특정 기업의 수익성과 내부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것은 공공성의 후퇴이자 정책신뢰의 붕괴다.

과거 삼성SDS의 사업참여 과정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전력요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주권과 산업 속도, 지역균형발전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두 차례 유찰을 이유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며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 지분은 51%에서 30% 미만으로 축소되고, 민간 지분은 70%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산 AI 반도체 의무 조항과 매수청구권은 삭제됐다.

거기에 입지 선정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이 그동안의 약속과 계획과 달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로 결정된다면 정부와 사업 모두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

명실상부하게 광주는 이미 AI생태계 완성의 ‘속도와 집적’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다. 그에 더해 대용량 GPU 투입을 위한 기업 구매 약속, 과격적인 가격의 부지 제공, 전력요금 부담 완화 특별법 추진, 1천억원대 투자지원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됐다. 이러한 광주시의 선택적 투자와

노력은 중앙정부의 공약과 정책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약속을 믿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지역의 투자와 노력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배신이다.

특히 광주는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지역이다. 그 기대와 신뢰가 기업의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지면,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담긴 시민의 믿음은 단순한 지지표가 아니라, 정부의 약속과 공정한 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입지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공약의 무게를 정책으로 지키고, 입지 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절차진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AI 인프라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도, 정책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AI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민간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에서 시작된다. 이제 정부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고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철도의 처녀지’ 강진에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목포보성선 철도 강진 역이문을 열었다. 조선 태종 때 강진 이름을 사용한 지 608년 만에 철마가 강진 들녘을 달리는 개벽이 일어났다. 강진은 산, 바다, 개펄, 호수, 강이 모두 있고 별도 좋다. 물산이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사는 곳, 이름하여 ‘편안한 나라(康津·강진)’. 이 강진에 철도가 더해졌다.

강진역이 문을 연 곳은 강진을 목리라는 동네. 목리(牧里)는 ‘농을 방(放)’자를 쓰고 있어 ‘소가 풀을 뜯는 장소’라고 파자(破字)할 수 있겠다. 초지(草地)는 ‘맛있는 풀이 있는 먹이터’로 풀이된다. 강진 읍내에서 목리로 가는 도로명이 ‘초지길’이다. 목리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풍천장어의 명성도 남다르다. 유배 생활로 지친 대신이 목리 장어로 건강을 챙겼을 거라는 말도 있다. 해방 전까지 목리 다리 근처에 일본인 장어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강진과 완도·해남에서 잡은 장어를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드넓은 들판에다

‘남도해양관광열차’ 강진역, 남도관광의 또 다른 이름

값비싼 풍천장어의 산지 목리는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마을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통된 목포보성선은 왜 하필 이런 풍요의 땅, 목리 들녘을 관통하고, 이곳에 역사를 지었을까? 강진의 유립 어른들은 “목리 인근 평동에 파발역인 ‘관터(館基)’가 있었다는 말을 구전(口傳)으로 들은 적 있고,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한다.

어쨌든 이번에 개통된 목포보성선은 목포↔보성 구간 82.5km를 오가는 단선 철도. 이 구간에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장동, 신보성 등 6개의 역이 신설됐다. 이 구간은 평일 왕복 8회, 주말 왕복 10회씩 디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달린다. 평균 시속 150km로 목포↔신보성까지 1시간15분이 걸린다. 이 노선은 두 개의 별칭을 갖고 있다. 관광열차의 의미를 강조한 ‘남도해양관광열차’라는 이름. 또 전남 남해안을 따라 달리는 노선 형상이 S자로 구불구불하고, 남해안 바다(Sea)를 끼고 달린다 하여 ‘S-Train’이라는 중의적 별칭을 함께 갖고 있다.

그 옛날 부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東순천 西강진’ 시절, 영남에서 순천을 거쳐 강진으로 오면 강진을 기점으로 목포, 해남, 영암, 완도 등지로 향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강진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이었다. 이번에 개통된 6개의 역 가운데 5개는 모두 무인역으로 운영된다. 강진

역에만 30명이 넘는 직원이 상주하며 원격으로 5개 역을 제어한다. 교통의 중심 강진역이 S-Train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강진역 개통은 관광 등 지역경제에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新강진 시대’의 개막이자 중대한 사건이다. 강진역은 강진읍에서 남쪽 직선거리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읍내 북쪽의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 4분, 도보 25분 거리. 그동안 버스·승용차로만 가능했던 강진을 철도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철도 개통과 함께 2026년 말에는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도 개통된다.

이제, “강진 가는 길이 멀다”는 말은 옛말이 된다. 강진으로 가는 길이 다양해지고 30분 이내의 시내권 접근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철도 시대 개막으로 매력 넘치는 강진의 4계절 축제와 관광 인프라,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 등을 좀 더 꼼꼼히 준비한다면,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려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핸디캡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이를 위해 강진역을 오가며 생기는 불편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철도여행이 주는 낭만과 이색체험,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꾸준히 행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던 조선시대 파발역처럼 현대의 파발역으로서 강진역은 남녘의 새로운 관문이자, 강진 관광의 시작점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10월21일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이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광복과 함께 1948.10.21 미군정 체제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경찰 독자적 치안업무를 수행한지 어언 80년이 흘렀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속에서도 경찰은 해방직후에는 정부수립의 기초를 다진 건국경찰로, 6·25전쟁 당시에는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국경경찰로 현재는 국민의 경찰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컫는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곳에 위치한 공직자이기 때문이라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 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해 악성사기, 마약과 도박, 신종범죄, 가짜뉴스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

제80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한 소회

하면서 경찰의 책임감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여전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좀처럼 일소되지 않으면서 정작 오롯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경찰관 책무 이행에 치안력이 불필요하게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에 입문한지 어언 30년이 훌쩍 넘긴 필자의 입장에서 불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경찰 수난사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지금 우리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선진 치안강국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경찰이 바로서야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바

로 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냉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경찰의 치안활동은 곧 국민들의 행복치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선진일류 국가는 법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새벽 서리를 맞으며 골목길을 누비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 경찰의 날은 단순히 경찰관만의 생일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일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정과제로 더 확대돼야 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7년도 공모를 통해 전남 신안을 포함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2년 간 해당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촌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이 목전에 다가온 것으로 특히 전남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에 남아 지킴이 역할을 해온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신안의 경우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지 발전 이익)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전체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검증한다. 정부는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규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 대상지 69개 군 가운데 49곳(71%)이 참여했지만 불과 7곳에 그쳤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범지역을 추가하고, 지역 맞춤형 사례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부담을 낮추며 정부 재정을 50%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농식품부도 삶의 질 만족도,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 논의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로 신속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아야 한다.

수돗물 불안감 호소 광주 식수원 관리 신뢰도 높여야

광주시 중요 식수원인 순천 주암댐 하층에 있는 광물질 중 ‘망간(Mn)’ 농도가 순간적으로 치솟아 상수도로 유입됐다. 시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변색된 물에 화들짝 놀라는가 하면, 더러는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순천지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왜이럴까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사워 한 번에 새 필터가 변했다. 녹물로 찌든 느낌”이라고 밝혔다. ‘물색깔’ 제목의 작성자 또한 변기안 물 색깔이 누런데 필터도 마찬가지로 했으며, 누리꾼들은 같은 반응과 함께 남구 효천지구 등 다른 곳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광산구 신흥동 인증 누리꾼은 당근마켓의 ‘동네생활’에 “물을 끓여먹고 샤워도 하는 데 몸이 가렵다”고 했고, 산정동 주민도 “막내아이도 이유 없이 자주 가렵다고 하고 둘째는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온다”고 댓글을 남겼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날 망간 농도 희석 물질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갑변 현상은 이전에 상수도로 들어온 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것이며,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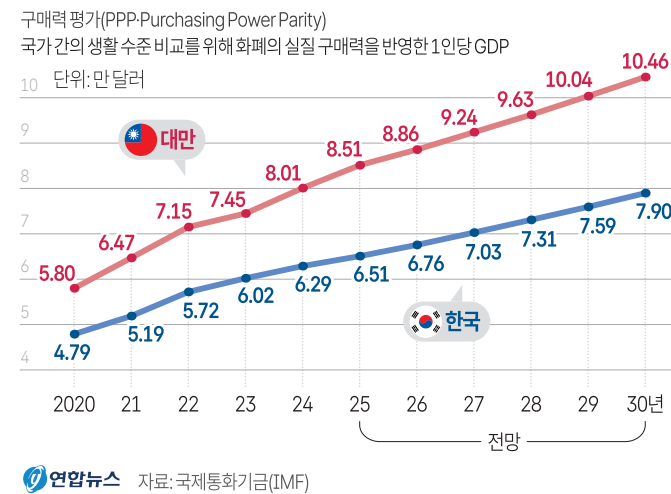
서 피부 등 신체 이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놔다. 하지만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민원도 수십건 제기됐다.

주암댐은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한 사건일 수 없다. 검출 기준 이하라 해도 직전 수치에서 몇 곱절 상승했다. 시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어떤 경우라도 안전이 훼손돼선 안 된다. 광주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탁수(흙탕물), 녹조, 유충 유입, 단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잇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찾고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수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권리가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문제가 드러날 시 신속 대응해야 한다. 광주시는 안전한 물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큰 책임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한국·대만 PPP 기준 1인당 GDP 추이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달러 가량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가 6만5천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6만2천885달러)보다 3.5% 오른 것으로 봤다.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 2천200달러, 1990년 7천741달러, 2000년 1만7천432달러, 2010년 3만2천202달러, 2020년 4만7천881달러 등으로 상승해왔다. 올해 수치는 세계 35위 수준이다.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대만의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8만5천127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2만47달러 높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의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올해 3만7천827달러로, 2003년 이후 처음 한국(3만5천962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PP 기준으로는 이미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제 순위도 미국(8만9천500달러·11위)에 바짝 붙은 12위로 한국보다 23계단 위였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 고 문 의	650-2099
	650-2070	마 케 팅 본 부	650-2070
	650-2011	경 영 지 원 국	650-2011
	650-2007	사 업 본 부	650-2007
	650-2020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